

중견기업 정책 브리프

VOL.19

2023.7.1.~2023.7.31.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활동

□ 중견기업 세제 건의 (7.11)

-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'중견기업 세제 건의'를 제출
- (주요내용) ▲일반 R&D 및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, ▲디지털전환 투자 촉진 세제 신설, ▲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총 17건의 세제 개선 과제 포함

□ 2023년 제1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(7.12)

- 중견련은 지역 중견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'킬러규제' 발굴을 위한 릴레이 현장 소통에 나서, 산업부와 공동으로 세종·대전·충청권 소재 중견기업을 초청해 간담회 개최
- 중견기업인들은 과감한 투자와 해외 시장 확대에 기반한 지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 강화 및 입지·환경·노동 규제, 각종 인·허가 규제, 신시장·신사업 진출 규제 등의 신속한 해소를 강조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동향

□ [국가기술표준원] 다수 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(7.10)

- 동일 제품에 운용 방안·목적 등이 다른 복수의 인증취득으로 인한 기업의 시간·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정보 확인, 다수 인증 취득 시 맞춤형 설계방안(소요 시간·비용 절감 시나리오) 제안, 기취득한 인증의 통합 등록 관리 등 제공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유럽연합(EU)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 (7.10)

- 유럽연합(EU) 내 기업결합 및 정부조달 참여 시 해당 기업*에 역외보조금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, 유럽연합(EU) 집행위가 시장 왜곡 여부를 평가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

* ▲(기업결합 신고대상) EU 내 매출액 5억 유로 이상이고 역외보조금 3년 간 5천만 유로 이상, ▲(공공조달 신고대상) 조달가액 2.5억 유로 이상이고 역외보조금 3년 간 400만 유로 이상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 (7.11)

- 6월 무역수지 흑자전환 등 실물경제 회복과 물가안정세에 따라 하반기 경제활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①수출 확대, ②첨단산업 등 투자 확대, ③R&D 혁신 선도, ④지역경제 활력 제고, ⑤경제안보 통상 강화 등 중점 추진

□ [환경부]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 환경 규제 개선 (7.10)

- ①안정적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공공하수도 운영·관리 기준 준수 예외 설정, ②조선소 도장시설에 대한 친환경 도료 사용률 기준 한시적 유예, ③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정보 제공 자료 간소화, ④전기차 폐배터리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, ⑤정수시설의 폐수 배출시설 제외기준 개선 등 5건의 환경 규제 개선

□ [관계부처합동]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(7.12)

-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'1차 대책' 6개 업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인력난을 겪는 4개 업종을 추가 선정해 일자리 매칭 지원, 인력 양성, 근로조건 개선 등 부처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

* (1차) 제조업, 물류운송, 보건복지, 음식점업, 농업, 해외건설, (2차) 건설업, 해운업, 수산업, 자원순환업

□ [기획재정부]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(7.12)

- 기존 지역투자의 한계를 보완해 지자체와 민간이 대규모 융·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마중물 투자, 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'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' 조성·운영

□ [국무조정실] 킬러규제 TOP-15 (7.14)

- 중견련 등 경제단체 및 민간협회 등과 협업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, 진입, 신산업, 환경, 노동 분야 킬러규제 Top-15 1차 선정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소재·부품·장비 특화단지 추가 지정 (7.20)

-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, 광주(미래차), 대구(미래차), 충북 오송(바이오), 부산(반도체), 경기 안성(반도체) 5곳을 '소재·부품·장비 특화단지'로 추가 지정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(7.20)

- 용인·평택, 구미(반도체), 청주, 포항, 새만금, 울산(이차전지), 천안·아산(디스플레이) 7곳을 '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'로 지정해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 원을 뒷받침하며, ▲인·허가 신속처리, ▲킬러규제 혁파, ▲세제·예산 지원, ▲용적률 완화, ▲전력·용수 등 기반 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

□ [기획재정부] 2023년 세법개정안 (7.27)

- ▲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, ▲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확대, ▲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(리쇼어링) 세제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'2023년 세법개정안' 발표

□ [금융위원회]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(7.27)

-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14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과제 마련
- (주요내용) 초격차 기술 특례 신설을 통한 첨단기술 기업 단수 기술평가 적용, 최대 출자자 요건 완화, 복잡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유형 체계화·합리화, 상장제도전 기업 신속 심사 지원 등

입법동향

1 정부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(7.3)

-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'기회발전특구'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조속한 지정·운영을 위한 세제·재정 지원, 규제 특례 등 세부 지원방안 마련

□ [고용노동부]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, 사업장 변경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 (7.5)

- 비전문(E-9비자)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개선, ②숙소비 기준, ③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
- (주요내용)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 없이 사업장 변경 시 대체인력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면제, 일정 권역 및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 허용,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, 장기근속 특례 신설, 공공기숙사 확대 지원 등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(7.14)

- 국가전략기술 활용 분야로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확산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업체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의 국가전략 기술을 사업재편 제도상 신산업 인정 범위에 추가

□ [공정거래위원회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(7.26)

-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▲서면 기재사항 구체화, ▲서면 기재사항 예외인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, ▲연동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, 절차 및 지원시책, ▲연동 관련 벌점·과태료 부과기준 등 마련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 (7.26)

-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 핵심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산업기술 보호 지침 개정
- (주요내용) 완제의약품 해외 인·허가 및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제 도입, 해외 특허분쟁 대응 신속처리 방안 마련, 특허출원 당시 공개된 기술정보만을 이전하는 경우 심의 면제 등

□ [특허청]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(7.27)

-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해 특허 등록료, 상표 출원·등록 수수료, 특허·상표·실용신안디자인 이전 등록료 등을 인하하고, 특허 심사청구료 현실화 등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 추진

2 국회

□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, 7.3)

-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능형 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

□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, 7.6)

-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대행협의 요건을 삭제하여 대행협의를 활성화시키고 수탁기업의 협상력 보완

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, 7.7)

- 중소·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자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

□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(김성원의원, 7.14)

- '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'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·관리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 특구 지정 및 조세특례 등 지원 근거,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등 마련
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성국의원, 7.25)

-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허가일로부터 10년으로 확대

□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성식의원, 7.26)

-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복귀 시 그 이전의 근무지역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지역으로 복귀시키도록 함

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(김경만의원, 7.28)

- 외국 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전략기술보유자가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

□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무경의원, 7.28)

-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혁신과제를 신속·유연하게 추진하도록 ▲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, ▲사업 개시·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업부담 완화, ▲시장·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례과제의 사후관리 강화 등 추진

□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양기대의원, 7.31)

- 공공기관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대기업이 제조·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위탁기업으로, 해당 대기를 수탁기업으로 간주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함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지원사업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 (7.13)

- 전기차·재생에너지·IoT 등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부품인 화합물 전력반도체의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▲국내 전기차·에너지·산업 수요 연계 소자 및 전력변환장치(모듈) 상용화 기술 개발, ▲구동회로(파워IC) 기술 개발, ▲화합물 전력반도체 핵심소재 기술 개발 등 전력반도체 밸류체인 전반(소재-소자-IC모듈)의 핵심기술 확보 추진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산업단지 내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(기업)에 대한 용적률 완화 특례 (7.18)

- 산업단지 내 공장 신·증설 투자 예정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(기업)를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필요성, 투자 역량 및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투자 예정 필지의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 지원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2023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(7.25)

- 수출품목 다양화·고급화 및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하고 해외마케팅 및 금융 등 지원